

## 전문가 요청

## 윤리문화 확산과 기업윤리의 날



강 태 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질문 1

기업이 윤리의 날을 시행하면 기업 내외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지만, 이익 추구에는 한계가 있다. 법률과 윤리가 그것이다. 법률과 윤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법률은 영리 추구에 일정한 한계선을 그어 놓지만, 윤리는 영리 추구에 품격을 더하는 세련된 효과를 낳는다. 그러한 세련된 방법 중의 하나가 윤리의 날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모로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첫째**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 직원들이 스스로 칭찬하는 회사는 펀더멘탈(Fundamental)이 튼튼하고, 높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수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기업 내부의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직원들이 업무용 물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출장비, 회식비를 과다 사용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은 기업은 가격, 품질의 열위에 있더라도 경쟁사를 제압할 수 있다.

물론, 윤리의 날이 또 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누가 보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사로 가져가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행사가 몇 년 반복 되면 기업의 내·외부 평판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 질문 2

우리사회에 윤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기업윤리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윤리는 기업과 임직원,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기업과 임직원’ 사이를 보자. 임직원이 회사 내에서 서로 존중하게 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직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영자가 고민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기업과 협력업체’ 사이를 보자. 우수한 협력업체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몫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기 시에 버팀목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협력업체를 유지하려면 협력업체를 존중하는 인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업체와 뇌물, 비자금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내부제보에 신경 써야한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윤리적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빈곤층에게 연탄을 지급하는 행사를 계획한다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보다는 전 직원이 릴레이 방식으로 하는 행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윤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기업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윤리문화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자.



## 동향 & 소식

### :: 국내

#### 국내 다국적기업들, 청탁금지법에 뜨거운 관심!

국내 다국적기업들이 최근 공포된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美상공회의소 윤리위는 3월 13일 박진영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초청해 회원사 준법감시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원사들이 '허용가능한 경조사비와 선물의 기준'과 같이 시행령 제정에 담길 세부기준에 대해 질의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다국적기업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월 26일 IBM 협력사 준법감시 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IBM Integrity Summit에서도 박진영 부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소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등 많은 기업들이 청탁금지법에 관심을 보였다.



#### UNGC Leaders Summit 2015 개최

'지속가능 발전과 기업의 참여'를 주제로 한 'UNGC Leaders Summit 2015'가 5월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400여명의 국내외 기업, UN,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올해야말로 글로벌한 액션의 해'라면서 유엔이 올해 9월 채택할 예정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강조하였다. 오후에 이어진 반부패 세션에서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노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기업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서울선언도 채택되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3/0200000000AKR20150513136200003.HTML?input=1195m>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경상북도는 안동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도내 사회적기업 대표와 관계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윤리경영 선포식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윤리경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가치인 '좋은 물건을 만드는 착한 기업'으로 인식되길 희망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날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대표는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할 것"임을 선언했다.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05601>

### :: 해외

#### '대기업 갑질' 알고 보니 결국 손해로 돌아왔다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협력업체와의 관계 악화로 차당 한 대당 144달러를 손해 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대·중소기업 상생 연구조사기관인 플래닝 퍼스펙티브가 대기업과 부품업체들의 관계가 자동차 회사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결과, GM과 크라이슬러는 부품업체와 관계가 좋지 않아 차 한 대당 144달러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GM과 크라이슬러가 도요타와 혼다모터스만큼 부품업체와의 관계를 개선했을 때를 가정해 추산한 수익을 지난 2014년 수익에서 뺀 방식으로 계산한 수치이다. 많은 대기업들이 부품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갑'질의 대가가 수익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2&oid=009&aid=0003486695>

#### 부패에 침묵하는 글로벌 방산업계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투명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전 세계 163개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질적인 부분 등을 2년 동안 평가한 결과 3분의 2 가량이 관련 프로그램이 없거나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4월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 정부에 계약을 맺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부패(규제)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것과,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427000706&mc=20150427114439\\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427000706&mc=20150427114439_BL)

####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비리 파장에 작년 18조원 손실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가 비리 스캔들 파장으로 약 170억 달러(약 18조 4,17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브라질 연방 당국은 작년부터 페트로브라스의 하청업체들이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도록 공모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뇌물 및 불법 정치 기부금의 형태로 전 페트로브라스 임원 및 정치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2313105258629&outlink=1>

## 글로벌 리포트

이번 호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인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윤리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연방판결지침(FSG,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1980년대 들어서 군수·금융산업의 부패 스캔들이 계속되자 미 연방정부는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윤리를 법으로 강제하는 '연방판결지침'을 1991년에 확정했다. 연방판결지침은 윤리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연방법을 위반해도 법원이 면책하거나 징계 수준을 감면해주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처벌을

3면에서 계속됩니다.

## 건전한 대관(對官) 문화 조성 토론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건전한 대관(對官)문화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6월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주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제·직능단체 및 19개 공기업이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기업의 바람직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1부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대관(對官)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박기찬 인하대 교수)과 강성구 한국기 정책위원을 좌장으로 한 1차토론, 19개 공기업 윤리경영 책임자들의 2차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19개 공기업이 '기업윤리의 날 운영', '투명한 기업문화 확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참석자 전원이 구호 "대한민국의 미래, 청렴과 윤리"를 외치면서 윤리경영 실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 권익위원장, 윤경SM포럼 청렴특강

윤리경영이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믿는 사람들의 다자간 모임인 '윤경SM포럼'이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을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시행과 윤리경영'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진행하였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청렴특강은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을 앞두고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이성보 위원장은 윤경SM포럼 회원사 CEO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업 임직원 교육 강화와 윤리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으며, 「청탁금지법」 등 우리 사회의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함께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2면에서 이어집니다.

강화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의 접근방법이다. 즉 범죄 행위로 기소된 기업들이 사건 발생 이전에 얼마나 효과적인 방지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는가를 판결에 참고한다는 것이다. 연방판결지침은 다음의 7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연방판결지침 7가지 요건

- 기업의 필요에 맞추어 준법 기준과 절차를 확립할 것
- 준법 프로그램을 감시할 고급 인력을 선임할 것
- 불법을 저지를 성향이 있는 임직원에게 재량적인 권한을 위양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준법 프로그램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출판물과 교육을 통해 훈련할 것
- 준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위한 조치 및 관련 제도를 구비할 것
- 적절하고 일관된 규율을 통해 준법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
- 준법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각종 위반사항에 대응할 것

실제로 미국 법원은 연방판결지침에 따라 1996년 일본 다이와은행에 3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이와은행이 금융기관 위험 관리와 법률준수를 위한 내부 메커니즘을 구축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방법 사상 가장 높은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연방판결지침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미국 기업들은 서둘러 윤리경영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의 기업윤리강령 의무화

엔론, 월드컴 등의 분식회계 스캔들로 홍역을 겪은 미국은 2001년부터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기업들에게 윤리강령 제정과 실천을 의무화 함으로써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들이 사내·외의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지게 하고 있다. 또한 윤리적 이슈를 다루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사내 보고메커니즘을 마련하게 하여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신뢰성이 증진되도록 한다. 각 상장기업들은 윤리강령 내용을 기업 스스로 결정하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 상장기업의 윤리강령 의무 포함 사항

- 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과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 해결
- 임직원이 기업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행위 방지
- 고객과 기업의 비밀 보호
-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 기업 자산의 보호와 합법적인 사용
- 법 · 규범 · 규칙의 자율준수
- 불법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보고 장려



## 기업윤리의 날을 운영하는 기업들

기업윤리 주관을 맞이하여 기업들이 윤리의 날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현대글로벌비스

현대글로벌비스는 윤리가 연상되는 6월 2일을 '윤리의 날'로 제정하고, 주요 부서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된 윤리경영리더 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육/홍보/시스템 분과별로 다양한 윤리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음 속 윤리의식, 행동 속 윤리실천' 표어가 새겨진 마우스 패드와 윤리화분을 배포하고, 사무실 주변에 윤리경영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은 매년 '윤리의 날'에 윤리실천 서약을 다시 하고, 서약서를 책상 앞에 부착하여 실천 의지를 함양하고 있다. 또한, 업무시스템 접속 시 e-Clean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올해 '윤리의 날'(6월 2일)에는 친환경 머그컵을 배포하여 종이컵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임직원 모두가 함께 윤리연극을 관람하기도 하였다. 또한, 협력업체에도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와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입찰시 가산점을 주는 평가제도를 운영해 윤리경영과 상생경영의 조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 로레알그룹

로레알그룹은 기업 내 윤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전 세계 모든 임직원들의 윤리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1년부터 모든 지사가 매년 같은 날 동시에 윤리의 날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최고 경영자와 전 세계 직원들과의 실시간 웹채팅이 이루어지며, 로레알 각 지사의 대표와 로레알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의 윤리 이슈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직원들은 윤리의 날 뿐 아니라, 각 나라의 윤리담당위원을 통해 1년 365일 언제든지 기업 윤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 동아ST

동아ST는 매년 4월 10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정하여 윤리경영 문화를 사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율준수의 날'에는 원칙과 법규 준수를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등의 다짐을 제창하며, 그 내용이 반영된 '자율준수 서약서'를 자율준수관리자

에게 제출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업무 수행 등의 CP준수 의지를 다진다. 그리고 CP준수 시상을 실시하여 규정 준수 우수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율준수 관리자의 메시지를 포스터 형태로 제작해 지점 출입문, 게시판 등 전 부서에 부착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메시지를 통해 임직원 스스로가 CP준수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내의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내윤리의식 강화와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한 달(5~6월 중) 동안 'KGS 윤리청렴페스티벌'을 실시하고 있다. KGS 윤리청렴 페스티벌은 '윤리를 나누다', '윤리를 묻다', '윤리를 지키다', '윤리를 즐기다'의 4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프로그램마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여 이해관계자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윤리경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특정일(올해 부터 6월 2일)을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윤리경영의 날'에는 청렴서약식, CEO윤리메세지, 명사초청특강과 청렴퀴즈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여 사내에 윤리경영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투명·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하는 청렴리본을 전 직원이 왼쪽 가슴에 부착하고 일과를 수행함으로써 청렴과 윤리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에서는 매월 4일을 'LX청렴의 날'로 정하여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청렴토론을 통하여 직원 간 정보, 의견 등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청렴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부서별로 청렴토론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사내 인트라넷(청렴충전소)에 등록하여 함께 공유한다. 또한 그 중 우수 아이디어와 사례를 선정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Q1. 청탁금지법에 대해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Q2. 청탁금지법 시행시 더 보완해야 할 내용이나 바라는 점은?

- 청탁금지법이 일시에 국가 전반에 깔려있는 부정부패를 해결하는 특약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 국민이 부정부패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보다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방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청탁금지법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 규정처럼 구체적이고, 교통법규처럼 우리 모두가 실천 가능하도록 좀 더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위생용품 제조업체 J과장

- 잘못된 관행과 접대문화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자하는 의지에서 이 법이 시작되었다는 데 우선적인 의미를 두고 싶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것처럼, 앞으로 청렴사회를 향해 발전하는 국민의식과 제도개혁을 기대해 본다.
- 청탁금지법의 목적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이므로, 청탁에 관해서는 어떤 공직자든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서비스업체 L과장

- 그 동안 우리 사회에 관행화되어 온 각종 청탁과 비리에 엄중히 대응하여 사회적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물론, '연줄'이나 '청탁'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과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 긴 시간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힘들게 제정된 만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제조·공급업체 H차장

-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되고 국가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재취업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생산업체 P차장

-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구성원들도 있으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 원안대로 이해충돌방지 부분도 추진되어야 하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사회 전체적으로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레저업체 K부장

## Q&A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Q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이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201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등을 위해 추진해온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입니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의견 제안과 건의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면 공직자를 둘러싼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져 공직 부패가 근절되는 것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윤리의 날

기업 윤리주간을 맞이하여  
기업들이 '윤리의 날'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 '기업윤리의 날'



저희 회사는  
포스터 부착과 같이 윤리의식과  
윤리실천을 되새길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스레터를 직원들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윤리 실천과  
행동강령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퀴즈대회를 열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사를 초청하여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윤리경영  
총괄자인 CEO가  
윤리경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전 임직원에게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군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윤리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윤리경영 퀴즈

윤리경영 기업에는 민형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의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미국의 제도는 무엇일까요?

- 1) NYSE 윤리강령 의무화 제도
- 2) 청탁금지법
- 3) 연방판결지침(FSG)
- 4) 사베인스-옥슬리법

※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커피 모바일 상품권(2매)을 보내드립니다.

● **지번호 정답: 1번, 해외부패방지법(FCPA)**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gukmin@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주소, 핸드폰 번호(모바일 상품권 수신)를 적어 보내주십시오(24일까지).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최은미님, 이정민님, 이수정님, 우경수님, 임진섭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